

- 과목5 (행정법총론) -

1. 다음 중 통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계엄의 선포
- ② 조약의 체결
- ③ 국무위원의 임명
- ④ 국가의 승인
- ⑤ 과세처분

2.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행정법관계의 특질은?

A씨는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한 후,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아닌 위법한 처분임을 알게 되어 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액의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납부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한다.

- ① 행정의사의 강제력 ② 불가변력
- ③ 불가쟁력 ④ 행정의사의 구속력
- ⑤ 행정의사의 공정력

3.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위임명령이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일정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다.
- ②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할 수 없다.
- ③ 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④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그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 ⑤ 법규명령이 그 성립·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하자있는 것으로 된다.

4. 다음의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자적 행정행위라고 주장될 수 있는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공기업 특허 시 내용 위반할 경우 특허취소
- ②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 납부 명령
- ③ 격일제로 하는 택시 영업허가
- ④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국민연금
- ⑤ 주차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

5.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② 행정규칙은 그 형식면에서 문서나 구술 모두 가능하며, 절차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법정 절차가 없다.
- ③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은 바로 위법한 처분이다.
- ④ 훈령이 부당한 경우 행정기관은 훈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⑤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도시관리계획은 국민이나 재산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다.
- ④ 계획제한에 대하여 근거법이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관례에 따르면 건축계획구역안의 주민은 계획의 입안청구권을 가진다.

7. 「행정절차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의 규율대상인 것은?

- ① 행정확약 ② 행정조사
- ③ 행정예고 ④ 행정계약
- ⑤ 행정계획 확정

8.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소송이다.
- ②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에 영향을 준다.
- ③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 ④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⑤ 피고의 경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경정이 있을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9. 행정법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없는 경우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법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유사한 사법규정을 적용·유추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② 사법규정의 적용문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법원론체계국가에서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 ③ 관리관계는 공익과의 관계 때문에 특별한 공법적 규율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법관계가 적용된다.
- ④ 사법은 공법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법의 적용에 흠결이 많아 사법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 ⑤ 현행법상 공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직접 규정한 것도 있다.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 ① 재량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기속행위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법한 행위가 되어 법원의 통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③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양자의 구별은 규정된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⑤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한다.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계약이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프랑스에서는 공기업특허나 공물사용특허를 공법상 계약으로 파악한다.
- ③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⑤ 위법한 공법상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질상 비권력적·임의적 작용이기 때문에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고 본다.
- ②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주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일반원칙에 구속을 받는다.
- ④ 판례는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
- ⑤ 법령의 수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법령과 행정현실 간에 생긴 괴리를 시정·탄력화하는 등의 법령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될 수 있다.
-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되어야 하고 적극적 목적으로 발동될 수 없다.
- ③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행정쟁송이나 국가배상 또는 정당방위가 있다.
- ④ 즉시강제의 발령에는 긴급성과 보충성 및 비례원칙이 요구된다.
- ⑤ 즉시강제에도 영장제도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전영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4.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법정기간 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③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간이·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정되는 절차이다.
- ④ 통고처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게 되어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된다.
- ⑤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다음 중 행정소송 대상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 ㄱ. 한국자산공사 공매통지
- ㄴ. 사법시험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
- ㄷ.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징계처분
- ㄹ.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6.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이어야 하므로, 집행행위 전단계인 내부적 결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 ②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실체법상 행정행위가 쟁송법상 처분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 ③ 도로상의 교통표지판과 같이 직접 물건의 특성을 규율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④ 행정행위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력이 확정된다.
- ⑤ 가행정행위는 잠정적 성질을 갖는 것 외에는 통상의 행정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권리구제절차도 통상의 행정행위에 따른다.

17.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대법원 판례는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 ③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④ 대법원 판례는 사업구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다.
- ⑤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 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8. 행정소송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상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②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③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판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 ⑤ 사정판결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19. 다음은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들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 (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이내에 하여야 한다.
- (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재결서 송달에서 재결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가 지난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180일 | - 7일 | - 60일 | - 2주 |
| ② 60일 | - 7일 | - 30일 | - 2주 |
| ③ 180일 | - 14일 | - 60일 | - 2주 |
| ④ 60일 | - 7일 | - 30일 | - 1주 |
| ⑤ 180일 | - 14일 | - 60일 | - 1주 |

20. 소송의 형태와 사례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소송 -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부조금 청구소송
- ② 항고소송 - 한국전력공사가 KBS로부터 위탁받은 수신료 징수권한 여부를 다투는 소송
- ③ 당사자소송 -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구제방법
- ④ 항고소송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결정 소송
- ⑤ 당사자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관급공사에 대한 소송